

진도 거주 세월호 유가족에 단수 예고(?)

시민단체 “진도군 2개월간 사용료 안 냈다가 뒤늦게 납부”

“행정적 실수인지 의도 있는 것인지...세월호 기억 지우려 해”

진도 팽목항에 거주하고 있는 세월호 유가족들이 단수 예고문을 받으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7일 시민단체에 따르면 팽목항을 지키는 유가족들이 지난 11일 단수를 하겠다는 행정조치 예고문을 한국수자원공사 진도수도관리 단장으로부터 받았다.

예고문에는 상하수도 사용료가 2개월간 밀려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사용료를 납부해 달라는 내용과 함께 미납된 상하수도 사용료를 내지 않을 경우 25일부터 급수정지를 실시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진도군에서 미납요금을 내면서 단수조치는 피했지만 시민단체는 진도군이 ‘팽목 기억 공간’ 조성에 협조를 하지 않고 있는 만큼 단순한 행정적 실수인지, 아니면 무언가

의도성이 있는 건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맞은 지난 4월 16일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진도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세월호 추모식에서 추모사를 통해 ‘팽목4·16 기록관’ 조성을 약속했고 이에 시민사회는 감사와 환영을 표시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팽목기록관 조성은 단 한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전남도가 진도군에 ‘기록관 건립을 위한 항만계획 변경 협조 공문’을 보냈으나 진도군의 5월 19일자 답신을 통해 협조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전남도는 진도군의 완강한 반대에 막혀 진행하기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위는 “그동안 진도군에서

상하수도 사용료를 내왔는데 2개월 동안 이를 내지 않았다는 것이 이상하다”며 “행정적인 실수인지, 아니면 의도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또 “진도군에서는 세월호 참사가 없었다는 듯 기억을 지우려 하고 있다”며 “진도군은 팽목항이 아닌 인근 서망항에 국민해양안전관을 지어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팽목항은 수많은 국민들이 방문했다”며 “국가로부터 구조받지 못한 아이들을 추모하는 곳이었으며, 아홉명의 미수습자를 애타게 부르던 기다림의 공간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팽목항에는 지금도 국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팽목항은 희생된 분들에 대한 위로와 새로



진도 팽목항에 있던 ‘팽목분향소’가 지난해 9월 초 학생들의 사진과 유품을 정리하면서 ‘4.16팽목기억관’으로 바뀌어 있다. 팽목기억관에는 단원고 10개반 단체 사진과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는 조형물과 기록 등이 남아 있다.

운 다짐을 위한 공간으로 기억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팽목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지키고자 하는 것이 단지 팽목이기 때문만은 아니다”며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며 생명과 안전불감증이 만들어낸 억울한 희생을 잊지 않기 위함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책위는 30일 진도 팽목항에서 팽목기억순례, 팽목항기억 예술마당, 팽목벽화 그리기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일본 도주 20대 절도범 비자 만료로 추방 당해

일본으로 도주한 20대 절도범이 비자 만료로 추방돼 공항에서 검거됐다.

광주 공안경찰서는 영입이 끝난 상점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아간건조물침입절도 등)로 A씨(2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7월 24일 새벽 시간 광주 광산구 한상가건물에 침입해 차킨 가게에서 14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5월부터 7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총 250여만원 상당의 절도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곧바로 일본으로 도주했다가 최근 관광비자 기간 만료로 추방당했다.

“여성 훔쳐보려고” 병원 화장실 침입 40대 실형

여성의 신체를 훔쳐보기 위해 병원 화장실에 침입한 40대가 징역형을 판결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염기창)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상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혐의로 기소된 A씨(46)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오후 2시 50분부터 4시 10분쯤 사이에 전남의 한 종합병원 2층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등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여성의 신체 부위를 훔쳐보는 등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내 술값 먼저 계산” 난동...경찰에 주먹도 휘둘러

광주 서부경찰서는 27일 자신의 술값을 먼저 계산해달라며 끼어든 후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주먹을 휘두른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A씨(38)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남 오전 5시 35분쯤 광주 서구 한술집에서 B씨(20)가 술값 계산을 하던 중 자신의 술값을 먼저 계산해달라고 요구했고, B씨가 이에 항의하자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항의하는 B씨의 머리를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주먹을 휘둘렀고, 경찰에 신고하려는 B씨의 휴대전화도 던져 파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1시간 가량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렸고, 경찰의 멱살을 잡고 발로 정강이를 차는 등 폭행을 지속했다.

경찰은 업주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그것 하다 3번 처벌받고” 상습 음란행위 30대

공연음란죄로 3차례 처벌받고도 다시 대학교에서 음란행위를 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9)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5일 오후 7시 45분께 울산 한 대학교 건물 앞에서 B씨(21·여)를 보며 바지를 내린 채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에서 “음란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목격자가 착각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바지 지퍼가 열린 상태로 급하게 도망가는 장면이 CCTV에 녹화된 점 등을 이유로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연음란죄로 벌금과 집행유예 등 3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재판받는 도중 다시 범행한 점, 범행 부인하면서 개전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관련 ‘문화상안’ 역사의식 없어”

양금덕 할머니 “진정한 사죄가 가장 중요”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 27일 오전 광주시의회 3층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쓰비시 중공업에 대해 법적 판결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중공업에 강제동원 배상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우리 정부와 정치권에 책임있는 역할을 다하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27일 오전 11시 광주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미쓰비시 중공업 대법 판결 1년, 한·일공동성명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 측의 대법원 판결 이행을 촉구했다.

시민모임은 일본 정부와 미쓰비

시중공업은 한국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인권 회복에 즉각 나설 것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역사 문제를 정치적으로 접근하려는 우리나라 정부와 정치권 행보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시민모임 측은 “강제동원 문제가 지난해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후 일본에서 강제집행 절차가 이행됐다”며 “이후 화이트리스트 배제 보복 조치, 또 한국은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불가 결정을 내리는 등 역사 문제가 정치, 군사 문제로 번지게 되면서 우려되는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 할머니들을 한일 갈등의 요인으로 보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 할머니들은 역사의 피해자로 인권과 명예회복 대상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강제징용 문제해결 방안으로 문화상 국회의장이 임명회를 진행 중인 이른바 ‘문화상 의장 안’에 대해서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상갑 변호사는 “문화상 의장

안’은 일제 강제동원 진상규명과 일본의 공식 사과는 빠진 채 피해 보상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마저도 누가 어떻게 배상금을 모으는지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문 의장이 최근 일본을 방문해 밝힌 ‘1+1+a’ 방안은 한일 기업(1+1) 자발적 출연금으로 재단을 만들고 양국 국민이 성금(+a)을 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변호사는 “문화상안’대로면 일본의 공식 사과없이 우리 세금으로 3000억을 모금해 피해자에게 줄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그럴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는 역사를 해결하지는 역사의식은 없고 갈등을 미봉하고 막자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지 않고는 ‘문화상안’에 담긴대로 1500명만 해결하고 종결하지는 이유로밖에 설명되지 않는다”며 “국회의장이 이런식으로 문제의식을 갖고 접근하는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피해 당사자인 양금덕 할머니 역시 “우리나라를 무시하는 식으로 주는 돈은 받지 않겠다. 일본은 양심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고 사죄하라”며 “사죄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귀 기울여 듣는
성공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광주지역 기업들이 상생협력의 정신으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상공회의소가 되겠습니다.

광주상공회의소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희망!

지역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제 23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정창선]

중흥건설